

평화지역의 일자리, 고부가가치 제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성 준비할 때

백영미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부연구위원

youngmibaek@rig.re.kr

강원도 평화지역 산업구조

경제총조사(2015년) 기준 평화지역의 산업구조를 1차, 2차 및 3차 산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3차 산업의 비중(88%)이 전국 평균(85.6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화지역 5개 군의 산업에서 농업의 비중은 전국 대비 높고, 강원도 평균보다도 높은 반면에 제조업은 전국 평균 대비 평화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을 기준으로 5개 군의 사업체 수는 전체 농업 가구 수가 13,486개, 서비스업은 11,078개, 제조업은 963개 업체가 운영 중이다. 농업을 제외한 전체 사업체 수에서 제조업체의 비중은 6.45%로 비중이 매우 낮고, 서비스업체의 비중은 74.2%로 매우 높다. 서비스업체는 철원(2,851개), 인제(2,678개), 고성(2,263개) 순으로 많으며, 제조업체는 철원(255개), 고성(228개), 인제(204개) 순으로 많다.

(단위: %)

	1차산업 (농림, 축산, 수산업)	2차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 전기가스수도업)	3차산업 (1 및 2차 산업 이외 모든 산업)	전국 대비 비중
전국	0.08	14.24	85.68	100.00
강원도	0.20	10.48	89.32	3.45
평화 지역	철원	0.36	10.71	88.93
	화천	0.49	11.64	87.87
	양구	0.54	14.44	85.02
	인제	0.27	11.48	88.24
	고성	0.33	13.48	86.19

자료: 통계청, 경제총조사(2015년 기준)

<표-1 평화지역 5개 군의 산업구조>

평화지역의 심각한 산업불균형

강원도 평화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역개발의 제한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온 결과, 산업구조에서 공공·국방 행정서비스가 타지역 대비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 그에 따라 행정서비스 기관에 의존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이 군부대와 군청 소재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 내 불균형마저 매우 심각하다. 개발 제한이라는 장벽이 제조업, 광업, 건설업들이 유입되기 어려운 산업구조의 원인이 되었으며, 이에 평화지역민들은 군부대와 행정기관 인근에서 음식업 및 숙박업, 도소매업과 농업을 영위하는 수준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평화지역의 제조업, 건설업과 광업을 모두 합한 2차 산업 비중이 15% 미만이고, 1차 산업이 1% 미만인 데 반해 3차 산업의 비중은 85% 내외로 매우 높아 산업 불균형이 매우 높고, 저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경제체계가 심각한 위기로 고착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오랜 고민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평화지역은 산업다각화 정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부족했고, 기존의 서비스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시도가 약해 평화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도 개선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지난 10년 이상 사업체 수의 증가가 매우 미미하다.

그러나 경기도 접경시군 중 파주시와 양주시는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제조기업 유치를 통해 지난 10년간 사업체의 수가 30%, 60% 증가하는 극적인 지역혁신 효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 강원도 평화지역이 공간적, 제도적, 지리적 여건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이 두 시군의 지역경제 육성 결과는 벤치마킹할 모범시군이라 할 수 있다.



자료: 균형발전위원회(2020)

<그림-1 접경지역 사업체 수 변화 추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

평화지역의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에서 창출되는 일자리가 전체의 20% 내외로 낮으며, 서비스업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80% 이상이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업의 일자리 중에서 영세 소상공인 기반의 일자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자리 창출 기여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매우 낮다.

이에 평화지역은 연차별로 경제활동인구의 변동이 심하며, 청년 고용률의 비중도 매년 변화 폭이 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이 제공하는 통계 수치상으로 평화지역의 실업률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도권 대비 노인들이 소상공인형 사업을 지속하는 사회 구조적 환경에 따른 수치상의 착시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평화지역이 현재의 저소득이 지속되는 경제적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직종의 일자리와 청년 노동자들을 유입할 수 있는 기업들의 유치가 급선무다. 이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제조기업을 유치하고, 벤처기업들을 육성하고, 지역 출신자들의 창업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민들의 일자리가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산업구조 개편을 빠르게 시도해야 할 시점이다.

평화지역 경제를 살리는 첫 단추로 국방산업 기업 육성 정책 추진

“강원도 기업들이 국방산업 조달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

국방부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비무기 분야 제품을 방위사업청을 통해 조달량을 매년 증가시키면서, 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충남, 충북, 경북, 전북 등 10개 시군은 국방벤처센터 유치를 통해 지역의 대형 판로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여, 기업들 매출액 향상에 크게 기여하면서 매년 5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검증되고 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2020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방벤처센터를 통한 조달 참여기업의 2019년 국방 매출액이 5,228억 원이며, 관련 고용인원이 3,034명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철원은 쌀가공품과 플라즈마 관련 제품, 고성은 해양바이오제품, 양구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 평화지역은 시군 특화상품을 육성하면서 소수의 기업이 대형화되며 성장하고 있다. 또한 평화지역 인근 지역인 춘천에서는 바이오산업이 매우 빠르게 육성되면서 그 파급효과가 평화지역 5개 시군으로 확산되어 고부가가치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평화지역 접경지 시장군수협의회를 통해 공동 정책으로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국방 벤처센터 유치하고, 강원도 기업들이 국방산업 조달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터주는 기구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단기, 중기, 장기 로드맵을 통한 평화지역의 국방산업 육성과 일자리 정책 추진

1단계, 단기적으로 국방벤처센터 유치와 국방산업 분야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신설하고, 강원도 국방산업 육성과 기업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이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국방벤처센터를 평화지역에 유치하고, 강원도 벤처펀드 1, 2, 3과 매칭을 통해 강원도 기업들의 국방부 조달시장 진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2단계 국방과학연구소의 중소기업기술이전 사업을 위한 민군기술협력진흥원과 MOU를 통해 지원기구를 국방벤처센터 내 설립하고, 평화지역 기업들의 기술역량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3단계 장기적으로 접경지시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화지역특구를 현실화하고, 특구 내 스마트혁신지구를 만들어 국방벤처기업들이 유입되도록 국방벤처혁신타운을 조성할 수 있다.

평화지역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 유입을 실현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안은 제조업의 육성이다. 이에 평화지역 5개 시군은 산업구조 개편을 위한 공동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사업을 통해 제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대안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이며,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강원연구원



발행번호

No. 21-15

발행일

2021년 11월 3일

통일·북방정책포커스는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본 포커스에서는 통일·북방과 관련한 이슈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통일·북방연구센터: ljh527@rig.re.kr/033-250-2985